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22면	강도다리 종자 무상방류 행사	1
江原日報	12면	강도다리 종자 무상방류	1
江原日報	온라인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추석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에 만...	2
CBS	온라인	"안전한 추석, 행락철 만들자" 박기영 강원도의원, 선제 대...	3
연합뉴스		강원 가을철 축제 57건..."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주의"	4
MBC 강원영동		고등학생이 발명한 '급발진 확인장치'...조례도 잇따라[1/2...	5
강원도민일보	20면	제1회 강원장애학생체육대회 황성서 개막	7
江原日報	21면	“장애인체육 미래 이끌 꿈나무들 화합 우의 다져”	8
THE Lead		“지역아동센터는 소중한 배움터”.. ‘강원자치도 지역아동센...	9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강원랜드, 변신이 필요하다	13
江原日報	03면	조례 개정한다며 단어 몇개·띄어쓰기 수정?	14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 이지영.박호균.강정호.원제...	15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15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김용복 도의회농림수산위원장(왼쪽)·이지영(비례) ...	15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박호균 도의원	15
강원도민일보	01면	역대 최대 세수펄크, 교육청·지자체 허리띠 졸라매기	16
강원도민일보	02면	소양강댐 피해보상 이뤄질까...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발...	16
강원도민일보	03면	도 접경지역 붕괴 위기에 생존권 위협까지 '설상가상'	17
강원도민일보	06면	도-강원농협 직거래장터, 도내 판매 부진 농가 응원 나서	18
江原日報	01면	폐광지 대체산업 특례 항만공사 설립에 총력	19
江原日報	02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윤곽	20
江原日報	04면	인텔 손잡은 강원, AI 반도체 인재 키운다	20
강원도민일보	04면	춘천지법·지검, 고은리 이전 첫 발	2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양양~울릉 항로 개설 기대 크다	22
江原日報	19면	[사설] 학자금 대출 체납 급증, 청년 파산 막을 대책은	2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일하는 청소년에 부당행위 근절돼야	24
江原日報	19면	[사설] 지방의회, 치열하게 역량 키워야 지역 발전한다	25

강원도민일보

2023 09 20 ()

22



강도다리 종자 무상방류 행사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가 19일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2023년 강도다리 종자 무상방류' 행사를 실시한 가운데 정일섭 본부장, 권혁열 도의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도의회

江原日報

2023 09 20 ()

12



강도다리 종자 무상방류 강원특별자치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19일 강릉 주문진항에서 권혁열 도의장,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장, 박호균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강도다리 종자 무상방류 행사를 진행했다. 강릉=권태명기자

2023 09 19 ()

江原日報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추석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기해야”

11월까지 열리는 도내 각종 행사.축제 57건
 도내 산악사고 40%가량 9월~11월 사이 집중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박기영(국민의힘.춘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이 19일 추석연휴와 행락철을 맞아 선제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해달라고 강원특별자치도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 위원장이 조사한 강원자치도 재난안전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치러지는 도내 각종 행사와 축제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비롯해 57건에 이른다. 또 도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악사고 건수는 2020년에 비해 47%가 증가했고, 2019년부터 4년 동안 도내 산악사고 4,166건 가운데 40%가량이 9월부터 11월 사이 집중됐다.

박 위원장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성묘와 벌초 등 야외활동시 벌쏘임.예초기 사고, 장거리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락철 단풍놀이를 맞아 수많은 군중이 자율적으로 운집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또 주최자 없는 행사에 인파가 몰리는 것이 위험하고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 09 19 ()

CBS

"안전한 추석, 행락철 만들자" 박기영 강원도 의원, 선제 대응 촉구

강원CBS 박정민 기자
핵심요약

추석연휴, 가을 행락철 사고 대비책 강조
강원 산악사고 40%, 가을철 집중
박 의원 "주최자 없는 행사, 세심한 대책 필요"



지난 8월 을지연습 관계자들을 찾아 격려하고 있는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강원도의회 제공 추석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선제적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박기영 의원(춘천3)은 19일 추석연휴와 행락철 안전 사고 예방조치와 대책을 강원특별자치도 집행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 재난안전실 자료 분석결과 9월~11월 도내 각종 행사와 축제는 '세계산림엑스포'를 비롯하여 57건에 이르고 추석연휴와 단풍놀이 기간이 겹쳐있다고 강조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성묘와 별초 등 야외활동시 벌쏘임, 예초기 사고, 장거리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자료를 인용해 2022년 산악사고 건수는 2020년에 비해 47%가 증가하고 2019년부터 4년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각종 산악사고 4166여건 가운데 40%가 9월~11월에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를 거론하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대책에도 각별한 주의와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주최자 없는 행사에 인파가 몰리는 게 훨씬 더 위험하고 사각지대가 있어 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강원 가을철 축제 57건..."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주의"



박기영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춘천3) 안전건설위원장은 추석 연휴와 행락철을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19일 강원도 집행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이 재난안전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또는 공공 기관에 의해 9~11월 치러지는 각종 행사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비롯해 57건에 이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묘나 벌초 등 야외활동 시 벌 쏘임이나 예초기 사고, 장거리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도 우려된다.

또 강원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악사고가 2020년 817건, 2021년 1천143건, 2022년 1천201건 등으로 증가 추세인 데다 40%가량이 9~11월에 집중해서 발생했다.

박 의원은 "단풍철을 맞아 군중이 자율적으로 운집할 우려가 크다"며 "주최자 없는 행사에 인파가 몰리는 게 훨씬 더 위험해 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이후 새로 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 09 19 ()

MBC 강원영동

고등학생이 발명한 '급발진 확인장치'...조례도 잇따라

이아라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제조사가 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자치단체마다 급발진 사고 예방이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접한 한 고등학생은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이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손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피의자가 됐습니다.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유가족은
제조사를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벌이고 있고
원인 규명까지 해야 해
일상은 10개월째 그대로 멈춰있습니다.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시죠.
경찰에서 형사입건 상에서 어머니가 과실이 없다고
최소한 결론을 내주셔야지
일상 삶을 조금이라도 회복하실 텐데 밖에 돌아다니질 못하세요."

굉음과 함께 빠르게 달려 나가는 차량.

결국 나무를 들이받고 사고가 납니다.

판사는 "운전자 측에서 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주문하고,

운전자는 자신 있게
'급발진 확인 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합니다.

이 장치를 개발하고 소개한 건
전남 송강고등학교 2학년 국지성학생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중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 동작과 압력의 정도를
차량 앞 유리에 반사해 블랙박스에 녹화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올해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국지성 학생은 강릉의 급발진 의심 사고를 접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국지성/ 전라남도 담양군 송강고등학교
"강릉 급발진 사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급발진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의회가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의회도 조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과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빠르면 오는 11월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급발진 사고에 저명하신 분들을 위촉해서
도내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규명 부분이라든지,
피해자 재판 소송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피해자 입장에서.."

하지만 조례가 할 수 있는 건
사고 후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 지원뿐이어서 한계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차량 제조 단계에서부터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후 차량 제조사가
사고 원인의 입증 책임을 지는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해야 하지만
국회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강원도민일보

2023 09 20 ()

20



제1회 강원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식이 19일 횡성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렸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1회 강원장애학생체육대회 횡성서 개막

29개교 선수 161명 10개 종목 열전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꿈나무들의 축제 '제1회 강원장애학생체육대회'가 19일 횡성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개최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열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와 횡성군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도내 최초로 장애 학생들을 위한 종합대회로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지원 강화를 통한 재능발굴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모두가 함께하는 장애인체육'이라는 주제 아래 29개교 161명의 선수는 이날부터 1일간 정식종목 4개(육상, 조정, 사이클, 슐런) 체험종목 6개(핸드사이클, 휠체어컬링, 디스크골프, 한궁, 레이저사격, VR체험) 등 총 10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쳤다.

또한 학생들은 경기장 근처에서 운영한 장애인스포츠버스를 비롯한 장애인체육 홍보·체험부스와 원목체험, 화전체험, 라탄공예, 달고나체험, 마늘빵, 페이스페인팅, 아이스크림 및 과자 나눔 등 문화체험부스 등을 경험하며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이날 개최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김명기 횡성군수, 김영숙 횡성군의장, 최규만 도의원, 6개 도가맹단체장, 13개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 9개 특수학교장, 11개 초·중등학교장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 학생의 소질과 재능발굴은 물론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도교육청은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등 지역별로 특화되고 세심한 특수교육으로 학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심예섭

“장애인체육 미래 이끌 꿈나무들 화합 우의 다져”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꿈나무들의 축제인 ‘제1회 강원장애학생체육대회’가 19일 횡성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모두가 함께하는 장애인체육’을 주제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횡성군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지원 강화, 재능 발굴, 여가생활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도내 최초의 종합체육대회라는 의미도 갖는다.

이날 열린 개회식에는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김명기 횡성군수, 김영숙 횡성군의장, 최규만 도의원, 김경녀 횡성교육장을 비롯한 13개 시·군 교육장, 9개 특수학교장 등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도장애인체육회장인 김진태 지사는 “도내 최초로 개최되는 강원장애

제1회 강원장애학생체육대회 횡성종합운동장서 열려
도내 29개 학교 161명 선수 참가 10개 종목서 실력 겨뤄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꿈나무들의 축제인 ‘제1회 강원장애학생체육대회’가 19일 횡성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김경녀 횡성교육장 등 13개 시·군 교육장, 9개 특수학교장 등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학생체육대회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체육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장애인 선수 고용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제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더 뜻깊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세심한 특수교육으로 학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학생들이 자

신의 재능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명기 군수는 “도내 첫 장애학생 종합체육대회가 횡성에서 열리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횡성군은 장애인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하루 동안 육상, 조정, 사이클, 슐런 등 4개 정식종목, 핸드사이클, 휠체어컬링, 디스크골프, 한궁, 레이저사격, VR체험 등 6개의 체험종목 등 총 10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됐으며, 도내 29개교 161명의 선수가 참가해 경기를 펼치며 우의를 다졌다.

행사장에는 원목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부스가 설치됐고, 장애인스포츠버스가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최근 도내 최초로 개소한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직원들도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의 건강 측정 등을 도왔다.

권순찬·유학렬기자

2023 09 19 ()

THE Leader

“지역아동센터는 소중한 배움터”.. ‘강원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 성료

전경해 기자



16일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 행사에 참가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홍천 더리더) 지난 16일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이 열렸다.



16일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에서 도지사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아이들이 신나 GO, 즐겁GO, 행복한 홍천’을 주제로 조용만 강원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이병욱 홍천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신경호 교육감, 이영욱 도의원,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경희 강원도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18개 시군 172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과 아동 등이 참석했다.



16일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에서 도의장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홍천송정지역아동센터의 오카리나 연주와 그룹 버터플라이의 연주 등 식전 축하공연과 개회식이 이어졌다. 개회식에서 도지사, 도의장, 교육감 상 등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수여 등의 시상식이 진행됐다.



16일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에서 교육감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른쪽 첫 번째 신경호 교육감). 전경해 기자

이경희 국장은 김진태 도지사를 대신해 축사를 전했다. 이 국장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늘어나면서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지역아동센터의 역할도 아동을 돌보는 일 뿐만 아니라 헌신과 사랑으로 희망을 응원하며 성장을 돕고 있다. 도에서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다양한 아동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6일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에서 홍천군의장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른쪽 첫 번째 박영록 홍천군의장). 전경해 기자

이영욱 도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다"며 "희망은 내가 버리지 않는 한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재능과 꿈을 힘껏 펼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마음껏 뛰놀고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16일 이경희 국장이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신경호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은 교육청의 목표이자 교육자로서 품은 소명"이라며 "자신의 꿈을 탐색하고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특별한 강원교육을 완성하려면 교육의 4주체가 한마음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16일 이영욱 도의원이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이어 "오늘 한마당 축제는 함께 나누고 배우고 즐기는 소통과 체험의 장, 아동복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다. 가정과 학교 담장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성장을 경험하는 소중한 배움터가 될 것"이라고 축사했다.



16일 신경호 교육감이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박영록 홍천군의장은 "오늘 축제는 다양한 문화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줄 것"이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자람을 위해 중단 없는 돌봄을 실현하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축사했다.



16일 박영록 군의장이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한편,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는 참여 아동들을 위한 체험 마당으로 진행됐다. IT체험과 홍보부스, 꿈 이음존, 지역문화체험과 먹거리 마당 등이 행사장 안팎에 마련된 부스에서 진행됐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江原日報

2023 09 20 ()

19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1998년 6월 설립됐다. 야심 차게 출범했지만 실상은 기대와 달랐다. 사실상 카지노 관련 규제로 제대로 된 성장은

여전히 어렵다. 관광진흥법으로 출범했지만 관광은 없고 사행산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 처해 있다.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지역사회에 지방세 세입이 증가한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방세 세입 증가로 필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고, 주민 복지 향상사업 등 폐광지역 시·군정 운영에 버팀목이 되고 있다. 또 지역 주민 고용, 카지노 이용객 증가로 인한 직간

접적인 경제적 과급효과가 발생한다. 강원랜드를 이용하며 주변 지역 관광, 숙박을 소비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과급효과를 더 끌어올리는 것이 숙제다.

무엇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간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 문체부에서는 카지노업을 관광산업 핵심으로 키울지, 지금처럼 통제만 할지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강원자치도에서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에 강원랜드만 쳐다볼지, 강원랜드와 연계해 주변 도시를 관광도시로 만들

강원포럼

김기철 강원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것인지, 강원특별법 개정에 반영해 관련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받을 것인지 입장 설정과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 관광진흥법에 따라 강원랜드 주변 도시는 관광거점으로 탈바꿈해야 하며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카지노업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카

강원랜드, 변신이 필요하다

지노업을 ‘관광산업’ 범주에 포함시키고 신규·변경·허가, 관리감독권을 문체부가 갖게 됐지만 2007년 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는 카지노업을 ‘사행산업’으로 규정하면서 현장지도, 도박중독 관리, 사행산업 매출총량 등을 규제한다. 이 또한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대표적으로 사행산업 매출총량 완화 또는 폐지, 입장시간 제한 폐지, 입장료 인하가 있다. 올 4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년 사행산업 매출총량은 11조4,220억원이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의 0.5% 정도 수준이다. 사행산업에 대한 매출총량 규제 자체가 난센스다.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개별 산업 전체 총량을 제한하는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을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사행산업 7개 전체 매출이 올라가 강원랜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타개를 위해 ‘행운산업’ 명칭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강원랜드 이용시간은 24시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입장시간과 인원

수에 제한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지금이 규제는 불편만 가중시킬 뿐이다. 재방문자는

사전 예약이 필수인 규정도 폐지해야 하며, 입장료 인하도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수조원 규모의 강원랜드 사내유보금과 카지노 게임 마일리지 폐광지역에서 사용되면 카지노와 관광, 쇼핑을 결합한, 마카로를 능가하는 명소가 재탄생할 수 있다. 폐광지역, 특히 정선군은 관광도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강원랜드가 역할을 해야 폐광지역 도시들이 성장해 국제관광지로 탈바꿈이 가능하다.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폐광지역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한 지금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江原日報

2023 09 20 ()

03

조례 개정한다며 단어 몇개·띄어쓰기 수정?

도의회 행정력 낭비 지적 잇따라... “일괄 개정 필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례 일부 개정안이 명칭 및 문구 수정에 그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단어나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조례안 검토 등을 위해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집행부가 제안하거나 일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가운데 센터나 위원회 명칭 중 ‘자치’를

‘심의’로 바꾸거나 ‘상답’을 ‘안심’으로 바꾸는 등 명칭 수정에 그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해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해당 내용을 발의하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입법 검토를 해야 한다. 이어 정책지원관의 의견을 반영, 의사관실에 안건접수

후 입법예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수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서 시급하지 않은 조례 개정으로 실적을 채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A도 의원은 “실제로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봤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괄 개정’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도의회는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바꾸는 등 656개 조례를 일괄 개정했다.

박용식 강원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은 “실제로 최근 단순한 문구 수정 등의 조례가 있었다. 해당 경우에는 앞으로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2023 09 19 ()

江原日報

[동정]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 이지영·박호균·강정호·원제용 도의원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이지영(비례) 도의원은 20일 오전 11시 고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41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개최식에 참석.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20일 오후 1시 강릉시 주문진 수산시장에서 열리는 2023 추석 명절 장보기 행사에 참석.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20일 오후 2시 속초 한화리조트 설악별관에서 열리는 2023년 속초시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참석.

원제용(원주) 도의원은 20일 오후 3시 원주 샘마루 도서관에서 열리는 개관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09 20 ()

17



강정호(속초)도의원은 20일 오후 2시 속초시 한화

호텔&리조트 설악별관에서 열리는 2023년 속초시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20 ()

12



박호균 도의원은 20일 오후 1시 주문진 수산시장

에서 추석명절장보기 행사에 나선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20 ()

17

(비례)도의원은 20일 오전 11시 고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 41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개최식에 참석한다.



김용복도의회농림수산위원장(왼쪽)·이지영

2023 09 20 ()

강원도민일보

01

역대 최대 세수펄크, 교육청·지자체 허리띠 졸라매기

도교육청 5000억원 부족 예상
올해 교부세 춘천시 974억원
원주시 928억원 감액 통보받아
부진사업 예산삭감 등 조치 예정

속보=59조원의 사상 최대규모 세수펄크가 현실화하자(본지 9월 19일자 1면) 지방교육과 지방행정의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올해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5000억원, 지자체의 경우 최대 900억원이 줄어들면서 곳간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본지 취재결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나눠지는 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 11조원 가량 줄어들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5000억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알려진 올해 교부금 규모(3조6141억)를 고려하면 교부금의 13.8%가 비는 셈이다. 여기에 당장 내년도 교육부 교부금 총액 규모도 올해 대비 6조9000억 가량 감소, 올해와 비교해 도교육청에 내려오는 돈이 3200억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지자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단위의 경우 춘천시는 당초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세 6053억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지난 18일 974억원(약 16%)이 감액됐다고 통보받았다. 원주시도 최근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등에 대해 928억원 감액을 통보받은 상태다. 동해시는 230억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태백시도 360억원, 속초시 290억원 감액을 전망하고 있다.

강릉시는 이날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군단위의 경우 교부세는 홍천군 450억원, 횡성군 500억원, 영월군 491억원, 평창군 600억원, 정선군 448억원, 철원군 320억원, 양구군 309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각 지자체는 앞서 올해 초부터 예상된 세수 감액 방지를 염두에 두고 추경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편 향후 3차 추경에서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작년 대비 추경액도 대폭 줄였다. 시에 따르면 작년 2회 추경액은 190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524억 규모로 편성됐다. 이중 정책사업비 경우에도 작년 2회 추경 631억원에서 올해는 400억원으로 줄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

화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1485억원으로, 시는 세출예산을 구조적으로 합리화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주시도 최근 제2회 추경예산을 당초 계획 대비 300억원 축소해 편성했다. 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극 활용해 재정 흔들림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승은·정민엽·지역종합

2023 09 20 ()

강원도민일보

02

소양강댐 피해보상 이뤄질까...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발의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
소양강댐의 빛과 그림자

물관리기본법 등 4개 개정안
취수부담금 부과·기금 조성
지자체 물 관리권 기반 가능
허영 "21대 국회서 통과 목표"

속보=올해로 소양강댐준공 50주년을 맞았지만 소양강댐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본지 9월 13일자 7면 등)되자 소양강댐 건설 이후 발생한 수물민과 주변지

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19일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은 '물관리기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담건설관리법)'과 '국가재정법' 각각의 일부개정법률안들로 구성됐다.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량에 비례하는 취수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역관리기금을 조성, 유역

별 물관리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부수법안으로 두고 있으며, 법안 통과 시 유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부담을 덜고 주도적으로 물관리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소양강댐 건설 이후 발생한 수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은 '담건설관리법' 개정안과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등을 담 주변지역에 환원하는 내용인 '담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허영 의원은 21대 국회 안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

다는 계획이다. 수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담 주변지역 지원 강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마련되면 소양강댐 준공 50년 간 따라다녔던 개발저해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소양강댐을 건설하면서 춘천 포함 3개 시·군에 걸쳐 축구장 7000여 개를 넘는 거대한 면적이 수몰됐고 수몰민 1만 8500여 명이 발생했다. 담 주변지역은 교통두절, 기상변화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연기원은 지난해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피해 액수는 최대 10조원을 상회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120억원이 지어졌다.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전기 생산·용수 공급에 따른 수입금은 9조 4330억원으로 추산된다. 발전 수입금은 연간 1444억원, 용수판매 수입금은 연간 442억원으로 연간 수입금 1886억원에 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허영 의원은 "소양강댐은 국가적 치수 역량의 진일보를 이뤄내고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그 이면에는 춘천을 비롯한 강원지역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며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은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손만큼 내고 준 만큼 받는다는 물값 개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9 20 ()

03

도 접경지역 붕괴 위기에 생존권 위협까지 '설상가상'

군납 수의계약 경쟁입찰 도입 2년차

농축수산물 공급 1년새 30% 감소

국방부 현 방식 2025년까지 유지

지역 소비·지방세 감소 '벼랑끝'

안정적 납품 법적근거 마련 주장

국방부의 군부대 급식 경쟁조달체계 도입이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강원도내 접경지역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며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도내 접경지역은 군 부대 해체 등으로 지역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현재, 각 부대에 공급되는 도내 농·축수산물이 지속감소하면서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도내 농·축협 17곳이 군 부대에 공급하는 농·축수산물 규모는 2021년 3만 2544 t (1592억원)에서 2022년 2만 2569 t (1209억원)으로 30.6%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1~6월) 기준, 최근 3년(2021~2023년) 간 도내 농·축수산물의 군부대 공급량(공급액)은 △2021년 1만 5334 t (718억원)에서 △2022년 1만 2394 t (613억원) △2023년 8687 t (536억원)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2년부터 군 부대 급식에 경쟁입찰을 적용하면서 기존 수의계약 비중을 100%에서 70%로 줄였다. 남은 물량은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계약 방식을 2025년까지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경쟁입찰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군납 수의계약 축소 피해는 접경지역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군부대 해체에 따른 상권 붕괴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운데 최소 1만 8000명의 군인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예상돼 지역소비·지방세 수입감소 등 연쇄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 기준으로 경쟁입찰 도입 전(2021년) 대비 올해 농산물 군부대 공급 축소 규모를 살펴보면, 강릉시가 -67.2%(-8억 100만원)로 가장 컸다. 이 밖에 △원주시 -47.8%(-7억 2200만원) △고성군 -46.6%(-4억 9500만원) △화천군 -45.9%(-8억 6400만원) △양구군 -44.4%(-3억 5700만원) △철원군 -44.1%(-7억 2200만원) △춘천시 41.7%(+2억 8600만원) △인제군 -40.1%(-3억 9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접경지역은 지역소멸 위기 등 벼랑 끝에 몰려 군 급식 경쟁조달체계 도입에 따른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대해 김명규 전국 군납협의회장(화천농협조합장)은 "국방개혁과 MZ세대 군인들의 입맛에 맞추는 부분 등으로 수의계약 물량이 크게 준 상황"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법과 군급식 기본법 등에 접경지역 농가들이 안정적인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 급식 수의계약 근거 등을 마련한 '군 급식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 09 20 ()

06

도-강원농협 직거래장터, 도내 판매 부진 농가 응원 나서

농특산물 구입·정선 사과 특판 행사

강원특별자치도와 농협 강원본부(본부장 김용욱)가 추석 명절을 맞아 폭염·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농산물구매에 나섰다.

도와 농협 강원본부는 도청 본관 앞 공원에서 김진태 도지사, 김명선·정광열 부지사, 김용욱 본부장, 도내 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 이날 장터에는 강원한우, 강원산돈, 강원인삼제품과 춘천지역 로컬푸드, 춘천시니어 농가공품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됐다.

특히 지난 6월 이상기후 및 우박피해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선 임계사과 농가 돕기 특판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김진태 도지사와 김용욱 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



강원특별자치도와 농협 강원본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19일 도청 본관 앞 공원에서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

을 겪고 있는 농가를 응원하고자 임계사과 등 장터 내 다양한 로컬 농특산물을 둘러보고 구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다채로운 사은 이벤트와 고향사랑기부제 및 답례품 홍보 등을 통해 바쁜 일상으로 신선한 우리 농특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에게 유

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이어 농협 강원본부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맞이한 기념으로 도에 100일떡을 선물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허영 국회의원, 노용호 국회의원이 깜짝 방문해 농산물 판매에 나선 농민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김호석

2023 09 20 ()

江原日報

01

폐광지 대체산업 특례 항만공사 설립에 총력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윤곽

석탄 경석 자원화 등에 방점
국제학교 개설 권한 확보 집중
이달 중 입법과제 모두 정리

속보=강원특별자치도 미래 비전 사업인 강원권 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윤곽이 나오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석탄 경석 자원화, 국제학교 설립 등의 추가 특례와 권한을 담은 3차 개정안 법제화를 연내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일 강원자치도와 강원일보사 등이 공동 주최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폐광지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민 의견 수렴(본보 19일자 1면 보도)이 시작됐다.

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폐광지 대체산업, 교육, 세제 개편 및 재정 확충의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어촌·어항 관리 권한, 동해안 해역 이용 협의권 이양 등 12개 특례를 검토 중이다.

폐광지 대체산업 특례는 석탄 경석의 신소재 산업 활용을 위한 광물지위 부여 및 자원화,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완화 등이 꼽힌다. 올 5월 2차 개정안에 접경지 특례가 반영됐으나 폐광지 특례는 아직 미흡하다는 점에서 3차 개정에는 반드시 관철한다는 각오다.

재정 확충 분야에서는 기금·교부세 확보, 세제 특례 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부의 세수 감소와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힘겨운 협상이 예상된다.

2차 개정안에서 빠진 교육특구 관련 특례의 경우 국제학교 설립 권한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수소에너지,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2차 개정안에 포함됐던 연구개발특구와 과학기술단지 특례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이달 내 3차 개정안에 포함할 입법과제는 모두 추려진다. 10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법제화에 나선다. 법안 통과를 위해 제주, 세종,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플랫폼도 가동한다.

최기영기자

2면에 계속

2023 09 20 ()

江原日報

02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윤곽 -1면에서 계속

도와 제주, 세종, 내년 1월18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전북은 오는 11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특별자치시도 협의회를 통해 특별법 개정에 4개 시·도가 공동 대응한다. 다만 실제 발의와 국회 통과 시기는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도는 지난 5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당시만 해도 연내 발의, 내년 총선 전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으나 최근에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흐르고 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이달 내 특별 발의를 위한 워킹그룹의 활동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단계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다만 발의 시기와 통과 목표 등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 09 20 ()

江原日報

04

인텔 손잡은 강원, AI 반도체 인재 키운다

속보=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연세대 미래캠퍼스,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도내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강원자치도, 원주시,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텔코리아는 19일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본보 지난 13일자 1면 보도)을 체결하고 AI 반도체 분야 인재 육성과 지역 신성장 산업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권명중 연세대 미래캠퍼스 부총장, 권명숙 인텔코리아 대표를 비롯한 인텔코리아 협

동·원주시·연세대 미래캠퍼스·인텔 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 국비 확보 등 생태계 조성 ... 김 지사 “좋은 투자 환경 만들 것”

력기업 30개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강원자치도와 원주시는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관련 기업 유치에 위해 인센티브 지원을,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AI 반도체 학부를 개설하고 인텔과의 협력을 통해 인력 양성과 산학연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텔은 협력사들이 원주의 AI 반도체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강원자치도 산업 및 AI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진태 지사는 “반도체 기업을 위한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어 기업이 투자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원자치도와 원주시,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텔 및 관련 기업들이 강원역사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우리의 노력이 AI 반도체 산업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자리가 원주에서 시작되는 AI 반도체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리

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권명중 부총장은 “수도권 기업과 자본이 지방으로 역류하는 기적을 만드는 과업을 원주에서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연구인력, 기업, 투자자들이 몰려와 원주가 세계적인 AI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권명숙 대표는 “국내 최초 프로젝트인 만큼 데이터경제 생태계 활성화의 주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 대학, 협력사와의 효과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인텔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설영기자 snow0@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권명중 연세대 미래캠퍼스 부총장, 권명숙 인텔코리아 대표가 19일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 도내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 09 20 ()

04

강원도민일보

춘천지법·지검, 고은리 이전 첫 발

도·시·강원개발공사 업무협약
행정복합타운 조성 시너지 효과
시 “법조타운화 목표 실현 최선”

속보=춘천지법과 춘천지검 청사가 춘천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본지 9월 18일자 4면)하기 위한 첫 발을 뒀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법, 춘천지검, 춘천시, 강원개발공사는 19일 도청 신관대회의실에서 청사이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5개 기관은 이날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청사를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는 관련 인허가 등의 행정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원활한 청사이전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차질이 없도록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진태 지사는 “도청사를 옮기는데 법원과 검찰이 같이 간 사례는 없었다. 우리 도청사는 춘천에서 춘천으로 옮기



19일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검찰청 청사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도청 신관대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

다보니 가능한 일”이라며 “두 기관이 함께하기 때문에 행정복합타운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전국 제일가는 행정복합타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상준 춘천지법원장은 “현재 법원 건물은 지어진 지 50년이 넘어 낡고 비좁아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며 “앞으로 법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질 좋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춘천지검장은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장 빠른 시기에 이전을 완료, 원활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단순히 지법, 지검 동반 이전을 넘어서 행정복합타운 일대가 법조타운화 하는 것이 목표”라며 “춘천시도 이런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은

강원도민일보

2023 09 20 ()

/ 19

양양~울릉 항로 개설 기대 크다

-지자체운항협약, 동해안 관광거점 부상 기회

양양군과 울릉도를 연결하는 정기여객선운항이 본격 추진됩니다. 양양수산항과 울릉도 서쪽에 위치한 현포항을 연결하는 정기여객선 항로가 개설되면, 동해안과 울릉도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뱃길이 생기게 됩니다. 양 지역의 관광활성화는 물론, 양양군이 동해안 관광의 거점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양양공항까지 정상운항하면 국제관광 도시의 면모를 갖추 수 있습니다. 여행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양양은 서울~양양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등 교통망 개선에 힘입어 영동지역 주요관광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은 물론, 주말과 연휴에는 숙박업소와 관광시설의 예약이 쇄도해 사계절 관광지로 위상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울릉도를 잇는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면 시너지 효과가 배가할 것입니다. 더구나 울릉도까지 가는 최단항로로, 해양관광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양양군~울릉도항로 개설은 양양군이 주도해왔으나, 이번에 양양군과 울릉군이 공식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해 운항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양양군이 사업에 의욕을 보이며 계획을 구체화해 전망은 어둡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로 개설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어항 개발계획 변경을 변경하고 접안시설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공유수면매립, 터미널 조성 사업자 모집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군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300억원 규모의 어촌신활력사업을 신청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업 선정 여부가 여객선 운항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양공항 정상화도 육해공 교통 접근망 완성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진태 지사가 양양국제공항의 비정기편 운항 중단과 관련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대로 살려보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됩니다. 공항이 정상화하면 육로는 물론, 하늘길과 바닷길까지 연결하는 교통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울릉도 정기 여객선 운항은 단순한 항로 개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관광을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여객선 취항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뒤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해양 관광의 콘텐츠를 풍부하게 할 호기이기 때문입니다.

江原日報

2023 09 20 ()

/ 19

학자금 대출 체납 급증, 청년 파산 막을 대책은

도내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11억4,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 청년들이 그만큼 많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도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자는 974명이었다. 384명이었던 2018년과 비교해 2.5배 늘었다. 이들이 갚지 못한 미정리체납액은 11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4억2,100만원에서 4년 만에 무려 2.7배나 늘어났다. 2020년(10억7,700만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도내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2년 연속 10억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최초다. 체납 규모가 크다는 것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여건이 나쁜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도내 대학졸업생들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빚에 짓눌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취업난이 심해져만 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다는 점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학자금 대출이라는 짐을 지고 출발선에서 있지만 대학 졸업 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도내 청년들은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도내 15~29세 청

년층 고용률은 44.7%로, 60세 이상 연령층(55.4%)에 못 미쳤다.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구하기 힘들어 택배사의 새벽 배송 외에는 자리가 없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개월 이상 이자를 내지 못해 결국 개인 회생 절차까지 밟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채무 상환 유예제도 등이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대출과 빚으로 고통받는 청년이 증가하면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 미래 설계 과정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경제 활동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청년층 부채의 악순환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학자금 체납 급증 수치는 일자리 및 임금 소득·인구 등에서 최하위권인 도내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다. 청년이 고향에 살고 싶어도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 타지로 떠날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직장을 찾아도 고용의 질이 나빠면 결혼을 미루고 이는 출산을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청년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학자금을 갚을 여력이 되는 청년이 얼마나 되겠는가. 한창 꿈에 부풀어야 할 젊은이들이 제대로 꽃을 피워 보기도 전에 파산자로 몰리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20 ()

/ 19

일하는 청소년에 부당행위 근절돼야

-3명 중 1명꼴 근로계약서 미작성, 다각적 고충 해소책 필요

강원청소년이 일하는 현장에서 욕설과 폭행, 성적 피해에 적지 않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적이 없는 경우도 무려 3분의1에 달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2023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실태 및 청소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책임연구원 김준영)'에서 드러난 수치입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소년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다각적인 보호 장치가 강화돼야 함을 시사합니다.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대원대학교가 실시한 강원 18개 시·군 청소년 2715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청소년의 33%가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서를 제공받거나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5세 이하는 58%에 달해 상대적으로 나이 어린 청소년의 업무환경이 불안정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더라도 본인이 받지 않은 경우도 14.6%였습니다. 특히 양구는 18개 시군 중 유난히 근로계약서 작성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분석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차별적인 부당 대우도 만연된 경향을 보입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일하면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은 10명 중 6명이었습니다. 욕설이나 폭행을 당한 경우는 10명 중 2명, 성희롱

과 성폭력 등 성적 피해는 12.8%에 이릅니다. 사업주대상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교육과 실천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상습적인 부당행위 업주와 사업장에 대한 목록을 공개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상 아르바이트는 청소년 일각의 예외 사례가 아닌 보편적인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삶에 큰 영향을 주기에 적극적으로 소비욕구를 해소하거나 저축하고 체험하려는 참여의지가 강합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에게 경제의식과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도 나왔습니다. 학교 교육과 대학입시에 밀려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에 인색해선 안 됩니다.

김준영 책임연구원은 "일하는 청소년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저 시급 이하의 급여나 추가 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일을 바로 그만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하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업체 발굴과 청소년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법규 준수 모니터링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바람직한 직업세계로 이어지려면 지원책은 실효적이고 다각적이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09 20 ()

/ 19

지방의회, 치열하게 역량 키워야 지역 발전한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3차 시·도 대표회의가 지난 18일 고성군 소노캄 델피노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수도요금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 간 수도요금 격차 해소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의적절하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편에 서서 우선적으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가려운 곳을 긁어 주겠다는 것

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더욱 뜻깊은 일은 지방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했다는 데 있다. 돌이켜 보면 1995년 지방자치가 부

활했을 당시 민선 지방의회가 먼저 부활했다. 그 의미는 의회의 역할이 자치단체장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영미계통의 선진 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는 ‘강한 의회 약한 시장’ 제도가 익숙해져 있다.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대해 자치단체장의 권력 남용 현상이 나타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당공천제하에서의 의회가 주민의 의사에 반해 소속정당 정책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 버린다면 의회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만다. 집행기관과 의회 양 기관은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돼

새롭게 출향하는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권력과 명예로 비치지 않고 오직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리매김할 때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있다. 선거에서 나타났던 갈등 및 반목을 해소하고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은 모든 지역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자치가 펼쳐져야 한다. 그 바탕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지방의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자 지방 의정연수센터를 2022년 2월에 개소했다.

최근 5년간 지방의회 관련 1,056명이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율이 높지 않다.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을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의 고성서 열려 자치·분권 시대 걸맞은 의회상 재정립 결의 초선 의원 도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다.

특히 초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이 직무 관련 교육 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경우 교육 훈련을 이수할 경우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우수 의원을 평가하는 지표에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지방행정 환경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들 역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춰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높아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과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